
서평

‘4월혁명’의 전체상 구성을 위한 커다란 일보
—정근식 · 권형택 엮음,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허은

‘4월혁명’의 전체상 구성을 위한 커다란 일보

정근식 · 권형택 엮음, 『지역에서의 4월혁명』, 신인, 2010

허 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지역 ‘4월혁명’ 연구의 필요

‘4월혁명’이 한국현대사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까닭은 냉전분단시대 민주화와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50년’이 지난 지금도 ‘4월혁명’이 커다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군사독재가 종식된 지 오래 되었지만 민족문제의 해결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이란 과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4월혁명’이 한국현대사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역사적 의의 때문만은 아니다. 전 국민들이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개개인을 옥죄었던 물리적, 심리적 억압을 떨쳐버리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4월혁명’이 새로운 집합적 경험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4월혁명’이 중앙정치 공간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지역운동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4월혁명’의 전개양상은 한국사상의 주요 사회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평안도농민전쟁, 임술농민항쟁, 갑오농민전쟁 등은 한국사상에서 운동의 중심이 중앙이 아니었음을 웅변하고 있고, 3·1운동, 6월항쟁 등은 사회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폭압적인 권력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월혁명’에서 지역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4월혁명’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나, 개별 주제를 다룬 연구들에서 누차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에서 전개된 운동이 ‘지역사’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냉전분단시대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모색하며 수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과 경험을 다양한 수준에서 규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4월혁명’ 관련 자료가 최근에서야 집대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4월혁명’의 지역사적 조망은 사실상 공백으로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4월혁명’의 전체상 복원은 최근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각 지역에서 전개된 ‘4월혁명’의 양상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었다. 이미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직후부터 지역에서 전개된 운동들을 알리는 책들이 출판되었다. 1960년 7월에 출판된 『민주革命의 발자취』(동아일보 기자 이강현 엮음, 정음사)에는 전국 각급 학교 학생대표들의 수기가 담겨 있어, 전국에서 전개된 운동의 양상과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달 지방신문 취재기자들의 증언을 모은 『四月革命鬪爭史』(조화영 엮음, 국제출판사)도 발간되어 각지의 운동을 실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¹⁾ 이러한 책들은 해당지역 참여주체들의 분노와 흥분을 현실감 있

1) 더불어 최근 지역 ‘4월혁명’ 운동 주체들의 주도하에 자료들과 경험담을 모은 자료집들이 출판되어 지역운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湖南四·一九三〇年史』(호남 4·19삼십년사 편찬위원회, 1995); 『2·28 民主運動史』 1·2·3(2·28 민주위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2000); 『大邱 4·19민주혁명 - 주역들의 회고』(4·19민주혁명 대구/경북동지회, 2008); 『三·八民主義擧』(대전·충남 4·19혁명동지회, 2005); 라상호 외 편찬, 『1960

게 전달해 주었으나, 지역운동으로서 ‘4월혁명’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4월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에 ‘지역사’의 관점에서 ‘4월혁명’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서 『지역에서의 4월혁명』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 참여한 필자 모두는 그간 ‘4월혁명’ 연구가 지역 연구의 부재로 전체상을 제대로 복원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의 축적이 당면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그 어느 분야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지역운동 연구에 관심을 쏟아온 연구자들 덕분에 ‘4월혁명’의 전체상을 복원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운동의 조건과 전개에 관한 이해 심화

이 책은 총론적 글 한 편과 각 지역운동의 실상을 다룬 10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10편의 글들은 대구경북, 인천, 수원, 대전, 충북, 강원, 전북, 광주, 부산,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을 다루고 있다.

‘지역사’인가 ‘지방사’인가라는 논의가 역사학계에 있었고,²⁾ 그 함의를 달리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제목으로 삼은 의도가 궁금했다.³⁾ 편자와 필자 모두에게 ‘지방’인가 ‘지역’인가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성)’이란 용어를 사용한 편집자도 전체상의 복원을 위한 전국에 대한 동시적 조망을 강조하고 있고(정근식, 28),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밝히고 있는 사례연구 필자들도 전체상의 복원을 지향하며 지역사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3·15의거 증언록』(3·15의거 기념사업회, 2010), 등.

2)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양정필,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제17호.

3) 이영호는 ‘지방’이란 개념은 중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치적·행정적 지배대상이란 의미를 담고 있고, 반면 ‘지역’은 인간생활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이영호, 2010, “지방사에서 지역사로 - 인천을 사례로 하여,” 『한국학연구』 제23집, 297-298).

를 ‘전체사’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산의 ‘4월혁명’을 검토한 김선미는 지역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역사는 전체사의 맥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 실현이고 거꾸로 전체사의 보편성이란 개별 지역사의 축적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사에 대한 인식은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김선미, 382-383).”

‘4월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의 양상을 복원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4월혁명’의 전체상을 구성한다는 문제의식은 책의 편집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연구를 모은 책이기에 글들의 배치가 중요한데, 이 책의 편집자들은 각 지역 사례연구를 ‘4월혁명’의 흐름을 고려하며 구성했다. ‘4월혁명’ 전반기 국면에 많은 활동을 보인 지역은 앞으로 배치되고,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활동이 더 두드러진 경우는 후반부로 배치되었다고 한다(정근식, 35).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4월혁명’이 지역의 각기 다른 조건들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규정받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데 있다. 지역사례 연구들은 역사적 경험, 대도시와 중소도시, 공업화의 정도, 지리적 격리 그리고 사회운동의 축적 등이 지역운동 전개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역사적 경험이 지역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석원호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고등학생 시위가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 ‘6·25전쟁’ 기간 미점령지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점령지역으로 남은 결과 언론계와 교육계에 있었던 다수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으로 이 지역 학생들의 저항의식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게 고취되었고 교원노조도 전국에서 최초로 건설될 수 있었다(석원호, 43). 역사적 경험이 ‘4월혁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반면 충북·대전, 광주전남, 제주지역 사례연구들은 역사적 경험이 부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6·25전쟁’ 시기 자행된 집단학살과 보복학살은 피해자 집단에

커다란 피해의식을 남겼고 지역사회에 메워질 수 없는 감정대립의 골을 파 놓았다. 이는 4·19 이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규명운동이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것을 막았다(박만순, 235). 대전에서 노근리 학살에 대한 피해보상 청원운동이 있었고, 전남 함평에서 ‘함평양민학살유족회’가 활동을 했지만(오승용, 373), 미점령지역 대구, 부산, 마산 등지와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이었다.

제주지역의 사례는 역사적 조건에 규정받으며 지역 ‘4월혁명’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찬식은 ‘4월혁명’ 당시 제주지역 주민이 “(4·3항쟁 시기) 국가공권력이 행한 폭력의 상흔을 내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섭되지 못한 사회심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공포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퇴진까지 침묵을 지키도록 만들었고, 이승만 정권의 붕괴에 따른 심리적 해방은 곧바로 누적된 분노를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주목하며 박찬식은 제주지역의 ‘4월혁명’에 대한 고찰은 “지리적이 아닌 심리적인 전국화”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박찬식, 418).

한편, 강원지역의 사례는 지리적 조건이 지역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깨닫게 해 준다. 엄한식과 신병식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지역이 영동, 영서로 생활권이 구분되고 다시 이 안에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다(엄한진·신병식, 249).

산업화의 정도도 지역운동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여러 필자들이 제기한다. 일례로 전북을 분석한 이성호는 전라북도가 ‘4월혁명’ 당시 전형적인 농업지역이었음을 주목한다. 그는 부정선거 동원으로 지역민심의 동요했으나 강력한 불만의 표출로 진전되지 않은 까닭을 국가의 억압 속에서 조직화·집단화가 차단된 농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았다(이성호, 295).

도시의 특성도 다양성의 주요한 조건이었다. 김은경·서규환의 분석에 따르면 항구도시 인천에서는 경제적 불만이 쌓였던 부두노동자들이 4월 19일 시위의 주요한 참여 주체였다. 인천부두노동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지만 정치의식을 갖고 사회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김은경·서규환, 105). 대도시인 부산의 경우에는 냉마주의와 같은 도시 빈민들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들은 4월 19일 부산경찰서 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김선미, 396).

지역사의 또 다른 강점은 더 낮은 수위의 영역까지 내려가 다양한 목소리들을 복원해 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책의 사례연구들은 지역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학생운동에 주도했던 이들 그리고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까지, ‘4월혁명’이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인입되어 갔던 다양한 이들의 고민과 소리를 보여주고 있다. 시위를 통제하려고 진땀을 흘리는 지방 검사장의 모습, 읍·면지역에서 전개된 시위양상 등은 지역질서의 변화상을 흥미롭게 전달해 주고 있다(박찬식, 428-429). 더불어 이 책의 필자들 대부분은 구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술자료의 확보는 문헌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의식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미 축적된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새로운 구술자료의 확보 등을 통해 지역운동의 양상을 보다 풍부하게 복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또 다른 학술적 기여라 할 것이다.

복합적·중층적 공간으로서 ‘지역’과 지역 운동사 서술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로서 ‘4월혁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운동이 전개된 ‘지역’이 복합적이고 중층적 공간임을 드러내는 작업이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가 결합된 복합적 공간으로서 ‘지역’, 마을, 소도시와 대도시로 이어지는 중층

적 공간으로서 ‘지역’, 그리고 이들 영역이 어떻게 중첩되며 하나의 ‘지역’ 단위를 형성·변화시켜 갔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사례연구들은 지역의 대표 도시들을 다루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4월혁명’시기 지역에서 운동이 분출된 곳이 도시, 그것도 대도시였고 자주 언급하듯이 농촌은 침묵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4월혁명’이 도시민들만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농민들을 보수적인 존재로 또는 농촌을 역사전개와 격리된 곳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농민들도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마산항쟁 이후 각지의 시위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평택의 한 농민은 1960년 3월 29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청소년 어린 이들에게 총을 쏘아 무수한 살상자를 내고 부족해서 공산당이라는 무서운 죄명을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하고 아니 인간으로서 말도 아니다. 언제나 우리 정부가 올바른 양심적인 진정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 농민은 점점 말이 아니다. 비료는 비싸고 농산물을 떨어지고... 7할 이상을 농민을 가진 나라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경기문화재단, 『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1)』, 2007, 649).

도시를 중심으로 한 농촌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경험을 직접·간접으로 공유해 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당(자유당과 민주당), 언론 매체, 행정 및 관제기구 등의 조직 정도와 운영주체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마을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망 그리고 여기에 속한 개인들의 지향을 더 많이 드러내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지역민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보다 풍부하게 보여주는 ‘4월혁명’의 지역사가 써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지역사 및 지역운동사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폭넓고도 다양한 사료발굴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월혁명에 참여한 주체들의 구술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서 본 개인의 일기에서부터 읍·면·군·동·도청 등 각급 단위 행정문서, 지방 경찰서 문서 그리고 법원 기록까지 입체적인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과 다양한 연결망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운동 주체를 중심으로 한 구술도 외연을 넓혀 ‘4월혁명’ 시기 지역행정 및 공간기관에 종사했던 인물들의 구술까지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사소하지만 이 책의 사례연구들을 읽으며 꼭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은 지도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지도의 제시는 운동이 전개된 공간으로서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운동양상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완사항은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의 과제만은 아니다. 전체와 지역의 종합을 고민하는 모든 한국현대사 전공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지역에서의 4월혁명』은 전체만을 위한 지역사 또는 전체와 단절된 지역사 이해를 지양하며 ‘4월혁명’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디딤돌을 놓아 주었다. ‘4월혁명’에 대한 지역연구의 필요성과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성과로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 하겠다.

